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광주·전남 대선공약 오늘 공개

광주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등 포함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무안공항 활성화·광주~완도 2단계 등 담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조기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대선공약을 8일 공개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막혀있던 국비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선 공약을 마련해 조기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해 차기 정부의 지원약속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탄핵정국에 미리 준비 중이던 지역 대선공약을 가다듬어 8일 발표한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추진중이던 국비 사업 가운데 탄핵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가장 기본적인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사태에서도 5·18 정신이 강조돼 왔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5·18 헌법수록의 적기라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심 공항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유치, 민주인권기념 파크 조성, 달빛 철도 준공,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활성화다.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은 대선 공약을 떠나 당장 추진돼야하는 사안이다.

특히 '의·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광주~완도 2단계(완도~강진), 첨단의료 복합단지 전남·광주 공동 유치 등도 조기 대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탄핵 결정에 따라 현안사업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새롭게 판을 짤 것인지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담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는 등 민심이반 사례를 들어 조기대선에서 대권후보들의 호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벌써 11주기…세월호 참사 추모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7일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인권교육과 직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사업 전국 최다 선정

2년 연속 선정된 강진·영암 비롯한 9개 시·군…81개 읍면동 혜택

전남 9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와 안전이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강진과 영암은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됐고 나주와 영광, 보성, 무안, 장흥, 곡성, 해남이 새롭게 선정돼 도내 81개 읍면동이 올해 혜택을 받게 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분야'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9개)가 선정됐다.

사업 총사업비는 4억원(국비 2억원)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도농복합형', '안전취약계층 중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주시의 경우 도농복합형 사업으로 복지·보건·교육·문화·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자원을 통합한 '나주형 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강진 등 8개 시군은 안전취약계층 중심형 모델로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영광군은 누전차단 기능이 포함된 멀티탭을 보급하고, 보성군은 장애물 감지기와 전등이 장착된 스마트 지팡이를 지원한다.

무안·해남·장흥군은 실내 리모컨형 LED 전등과 외부 태양광 LED 정원등을 설치하고, 곡성군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지도를 개발한다. 강진군과 영암군은 각각 'AI 기반 1인 가구 통합관제 시스템'과 '돌봄 플러그'로 비대면 안전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도심 활성화 위해 동계천 복개하천 일부 복원해야"

홍기월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광주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천 지천의 하나인 동계천 복개하천 일부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은 7일 제33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계천 복개하천 일부 복원을 통한 도시관광자원 확충"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도시 개발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복개된 광주 15개 복개하천 중 일부 하천은 복원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친수 수변공간 마련, 물순환 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동계천은 장원봉에서 발원해 광주 시내를 흘러 광주천에 합류하는 광주천 지천 중 하나"라며 "전남여고 일원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다면, 광주시의 문화관광 지형도는 미래지향의 새국면을 맞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계천 일부가 복원되면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공원의 버스킹 공연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코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 실천방안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2035년 동계천 분류식화 예정 시기를 앞당기고, 국비 지원율 25%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와 함께 방문객이 가벼운 물놀이 등 친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지용수 수질 확보 방안을 마련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교통편 무료 승차 조례 통과

이명노 의원 대표 발의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를 포함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시민에게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재정적 지원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 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는 5·18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광주IC 교통대란, 광주시·정부 함께 해결해야"

채은지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광주시와 정부가 서광주IC 일대 교통대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 광주시의원은 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광주IC 일대의 교통대란 해결을 위해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과 대통령 공약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서광주IC는 교통 요지지만 2026년 인근에 대단지가 입주 예정돼 있고, 복합쇼핑몰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줄줄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의 확장 사업의 50%를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고 전액 국비 전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운암사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 북문대로 및 동운고가 등 연결도로 구조 개선, 개발사업 대비 신규 도로 조기 개설, 용봉IC진입로 개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시 차원의 교통인프라 대응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50%(3967억원) 부담은 시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면서 "서광주IC 교통문제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용역 등을 통해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할 다양한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